

민주, 낙관론에 '엘로카드'... '상승세 꺾일라' 리스크 관리 총력

선대위 '언행 특별지침'... 막판 말실수 '노심초사' 이재명도 '셀프 입단속', 현장 연설 수위 조절도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총선 전쟁을 앞두고 내부 리스크 관리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말도 탈도 많았던 공천이 마무리된 가운데 어렵사리 상승세로 돌아선 당 지지율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돌발 약재를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1호 경제 대상은 설화(舌禍)다. 이번 총선의 운명을 가를 중도층의 예민한 표심은 말실수 한 번으로 놓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 선대위는 최근 김민기 총괄선대본부장 명의로 전국 17개 시도당 위원장과 총선 후보자들에게 '언행 유의사항 특별지침'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개인적 총선 낙관론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나가 전국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념하라',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발언이 추가로 확인될 시 즉각 엄중 조치하겠다' 등 경고도 경고 메시지가 담겼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인전의 14석이 당선되면 우리는 200석을 당선시킬 수 있다" (김교홍 후보), "민주진보개혁세력이 약진해 200석을 만든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가능하다" (박지원 후보) 등의 발언을 정조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현장 연설 때 '사이다'라는 별칭을 얻을 만큼 거침없는 언변을 보여온 이재명 대표 역시 최근 들어서는 격한 표현을 삼가려 애쓰고 있다.

지지자들의 열띤 호응에 목소리 톤을 올리다가도 애써 진정하거나 본인의 손



지원유세하는 이재명 대표. 지원유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을 찾아 연설하며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으로 입을 막는 장면도 여러 차례 나왔다. 앞서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12일 선대위 첫 회의 때부터 "역대를 불러일으켜 선거 전체를 망치는 경

우가 있었다"며 일찌감치 입단속을 신

신당부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24일 "유세 현장에서 빚어진 작은 실수 하나가 대형 약재로 돌아올 수 있다"며 "특히 이렇게 지지율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오르는 경우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북을 공천장을 받았던 정봉주 전 의원과 조수진 변호사가 잇따라 낙마한 것도 총선 본선을 앞둔 사전 리스크 차단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남은 기간 가장 큰 변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딱 하나다. 민심을 믿고 낮은 자세로 절실하게 나아가는 것"이라며 "모든 후보는 겸손하게 언행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상 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탄 것과 관련해 "특히 수도권 선거에서 우리는 수치를 보지 않는다"며 "정권 심판에 대한 민심을 믿고 가되 절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與 "용산발 리스크 넘어 이젠 민생"... 판세 반전 사활

이종섭·황상무 논란 일단락 판단... '물가·의대증원 갈등' 관리 올인

국민의힘이 4·10 총선을 17일 앞두고 그간 민심 이반의 원인으로 꼽혔던 '용산발 리스크'를 뒤로하고 '민생 앞으로'를 전면에 내걸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귀국과 '언론인 회칼 테러'를 언급한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사퇴를 계기로 철회된 분위기를 반전할 기회를 잡았다는 판단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24일 "야권에서 이대사 관련 이야기를 해 봤자 민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이제 우리가 정책과 민심으로 선거를 이끌어 갈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종섭·황상무' 논란이 '이대사 조기 귀국, 황 전 수석 사퇴'라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요구가 실현되면서 일단락됐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수직적 당정관계로 당이 용산에 '할 말'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이번에 당이 민심의 뜻을 관철한 모양새가 연출되면서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이 대사 귀국으로 야권이 제기하는 '도피 출국' 프레임에서도 벗어났다고 본다. 오히려 공수처가 이 대사 귀국에도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정치 행위를 한다며 역공을 펼치고 있다.

대통령실발 인적 리스크에서 한숨을 돌린 국민의힘 눈앞에는 이제 고물가와 의대 증원 갈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날야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야당이 정권 심판론 목소리를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전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민생 챙기기에 돌입했다. 조만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정부에 적극적인 물가 안정 대책

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과 의료 현장 공백 문제에 대해서 당이 다시 한번 용산에 민심을 전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당내에서 나온다.

선대위 관계자는 "정부가 강경한 대응에서 타협과 대화의 제스처를 보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 많다"며 "용산에 간접적으로 이러한 의견이 전달되는 것 같다. 정부가 너무 세게 가는 것은 지양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 개발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선대위 종합상황실 부실장인 홍석준 의원은 연합뉴스에 "매일 오후 정책브리핑을 통해 정책 공약을 강조할 계획"이라며 "선대위 회의에서도 민생특위 위원장들은 경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 역시 연일 지역 현장에서 민생을 챙기고 물가를 잡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철현 "압수수색은 재판 없는 처벌"

"2022년 39만여건 청구" 지적... 오늘 토론회

윤석열 정권이 압수수색을 수사기관 통지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 인권위원회(위원장 주철현)는 인권연대와 함께 25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압수수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 한상규 아주

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또 김영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준희 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장, 서누리 변호사, 이진동 뉴스비스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철은 2022년 한 해 동안 압수수색을 39만6천877건을 청구했는데 이게 전부 강제수사가 필요한 사건이었는지

의문이란 지적이다.

특히 압수수색을 남발하는 것은 원칙과 기본을 무시하는 반인권적 행위이며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여전히 검사 시절의 정체성과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압수수색이 4배 증가했는데 적법절차를 무시한 위법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는 재판 없는 처벌이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명제는 인권 보호"라고 지적했다.

/김진수기자

"건설붐 '4월 위기설' 가능성 없다 단언"

성태운 대통령실 정책실장 "정부에서 계속 관리"

성태운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건설업계 일각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른 '4월 위기설'이 나오는데 대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성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정부에서 계속 관리해나

가는 과정에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기준금리를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다다라 급리 환경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며 "기준금리 변경을 포함한 전반적 환경이 변화한다면 더욱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 관련 규제 합리화 개편 등도 이뤄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브릿지론' 과정에서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감독 당국에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기준금리를 내리면 내수 회복이 가능하나"고 묻자 통화정책에 정부가 일질 관여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김진수기자

22대 총선 프리즘

이개호·박노원, '동행정책' 협약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 후보는 지난 22일 영광군 선거사무소에서 박노원 전 예비후보와 '동행정책' 협약식을 갖고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로 약속했다.

이 후보와 박 전 예비후보는 이날 민주당의 승리와 지역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상호협력하고 이를 위해 당의 지침과



정책을 존중한다"는 등의 3개 항목에 합의하고 협약서를 교환했다. /김진수기자

문금주, 민생 경제 현장 목소리 청취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 후보(고흥·보성·장흥·강진)가 후보 등록을 마치고 민생 경제 현장 목소리 청취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문 후보는 녹차밭보성향토시장을 찾아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 선행지표로 활용되는 생산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1.5% 올라 7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민생 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민생 경제를 책



입해야 할 정부가 민생은 외면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4월 10일 고흥·보성·장흥·강진군민과 함께 압도적인 승리로 민생을 외면한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기자

안도걸 지지자들 "선거법 위반 김성환 고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 후보(광주 동남갑)는 24일 "전·현직 광주시 의원과 동·남구의원 등 11명이 지난 21일 김성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 훼손 등의 혐의로 광주지방법원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안 후보를 지지하고 자원봉사자로 선거를 돕고 있는 이들은 고발장에서 "김 후보가 지난 11일 광주시의회 시민통실에 서무소속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안 후보



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후보는 민주당의 지역구 후보로 선출되지 못한 것에 불복한 것도 모자라 구태의연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면서 무소속 출마를 정당화하려는 수단으로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선강기자

양부남, 선대위 출범... 필승 결의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 후보(광주 서구을)는 지난 23일 민주당 정권심판·국민승리 광주서구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총선 필승을 결의했다.

출범식에는 이병훈 민주당 호남권역 공동선대위원장, 광산을 민행배 후보, 동남갑 정진욱 후보, 서구갑 조인철 후보, 북구를 전진숙 후보 등이 참석했다. 선대위는 김경만 국회의원, 김광진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서대석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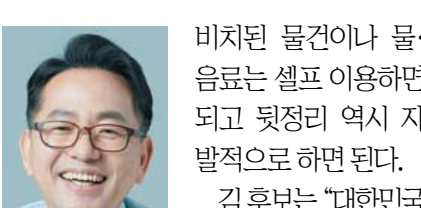


서구청장이 공동선대위원장, 심철의 시의회 부의장 및 이명노·서용규 시의원이 공동특보단장, 고경에 서구의회 의장이 상임 선대본부장을 맡았다. 양 후보는 "4월 10일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이 싸우는 날이고 국민이 승리를 하는 날"이라며 "다 같이 그날을 위해 열심히 뛰자"고 당부했다. /백선강기자

김문수, 시민 선거캠프 전면 개방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 후보(순천·광양·구례·곡성)가 24일 지지자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캠프 개소식을 갖고 선거사무소를 순천시민에게 전면 개방했다.

순천 조례호수공원 인근에 위치한 '시민 캠프'는 누구나 방문해 쉬어갈 수 있다. 특히 캠프 내 공간을 전면 오픈해 선거사무소 분위기가 아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센터 분위기로 조성했다. 순천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비치된 물건이나 물음료는 셀프 이용하면 되고 뒷자리 역시 자발적으로 하면 된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 주인이 국민이든 순천 민주당의 주인 역시 순천시민이어야 한다"며 "선거 캠프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제공하는 이유는 유권자(순천시민)와 함께 선거를 치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순천=양홍렬기자

정진욱 "대촌, 한국판 에너지 실리콘밸리로"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 후보(광주 동남갑)는 24일 "남구 대촌의 도 시첨단국가산단과 에너지밸리일반산단이 지역 경제를 주도하는 '한국판 에너지 실리콘밸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에너지 분야 실증·시험 시설을 융복합단지내 구축해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관련 교육기관을 설치, 인력 양성을 지원하면 유관기업의 수요를 충족할 전문인력 확충도 가능하다"며 "특히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R&D 관련 예산 지원 확대와 '지역 에너지혁신사업' 같은 R&D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곳의 산단에 공공기관 및 기업 유치, 정부 지원과 지자체 협력 등이 이끌어 낼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선강기자